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드론 조종사 양성 교육훈련 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4차 산업시대에 맞춘 전문교육과정 추가
15세 이상 광주·전남·북 구직 장애인 대상
훈련 · 자격 취득 및 취업…전액 국비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원장 정호연)은 드론 전문가 육성을 위한 '드론조종사양성 교육훈련과정'을 7월부터 시작한다.

15세 이상 구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본 교육은 드론 조종 훈련을 중심으로 드론의 전체적인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광주, 전남, 전북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취업을 희망하는 드론에 대한 관심과 취업에 대한 열정이 있는 장애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은 드론 조종 국가자격증(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조종자) 취득을 목표로 매주 월~금요일(오전 9시~오후 5시)에 이루어지며, 6개월간 진행된다. 1차 교육훈련생은 8월 9일까지 모집한다.

교육은 언제 어디서든 현장 투입이 가능한 드론 조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드론 운용에 대한 기본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기본적인 드론 조종과 촬영 학습 외에도 드론스포츠, 드론공연, 드론게임까지 실습할 예정이다. 또한 취업으로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직업 기초능력 향상 교육까지 제공된다.

교육은 전액 국비 지원되어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생에게는 숙식과 매월 28만원 상당의 훈련수당 및 교통비가 지원된다. 또한 훈련기간 중에는 상해보험 가입과 함께 취업 알선 및 직무적응지도까지 이루어진다. 전남직업능력개발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해 교육신청을 하면 선발평가를 통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전남직업능력개발원 정호연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경쟁력 있는 자원을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1월 21일에 2019년도 교육훈련을 개시한 전남직업능력개발원은 호남·제주지역 장애인의 직업 교육훈련과 직업재활을 위해 2002년에 개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장애인 전용 공공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다. 특화훈련·융복합훈련·산학연계훈련을 주축으로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남도교육청과 연계해 발달장애인직무체험관을 개설하여 발달장애 학생들의 직업탐색을 돕고 있다. 또한 신규 직종에 대비한 교과과정을 추가해, 경쟁력 있는 장애인을 키워내는 인력양성의 요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신봉우 기자

구례군,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추진

구례군은 7월 중순부터 '2019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월소득이 4인 가구 기준 2,879천원 이하의 등록 장애인으로써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장애인의 소득기준, 장애 종류·등급, 주택 개조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대상자는 15세대이고 가구당 사업비는 380만원 이내로 총사업비는

5,800만원이며 문턱낮추기, 보조손잡이 설치, 주택 출입로 보수, 장애인용 입식부엌 및 욕실개조 등 장애유형에 맞게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복지혁신 권고문 이행 위한' 민·관·정 토론회 개최

광주복지재단, 4대 분야 25개 혁신과제 이행 논의 예정

광주복지재단은 복지분야 시정혁신 권고문 이행을 위한 민·관·정 토론회가 23일 오후 광주시의회 5층 예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복지협치 기본조례(2018. 3. 1. 제정)를 근거로 구성된 광주복지협치 9개분과(복지종합, 지역복지, 노인, 장애인, 정신건강, 여성가족, 아동, 청소년, 보육) 중 복지종합분과 주관으로 추진됐다.

토론회는 김행란 광주혁신위원회 위원의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 혁신권고문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박미정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을 좌장으로 민간에서는 전성남 회장(광주사회복지사협회), 의회에서는 신수정 시의원, 행정에서는 김일융 국장(광주광역시복지건강국)이 토론자로 나섰다.

특별히 주정민 광주혁신추진위원장의 토론회 환영과 격려 인사말로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복지혁신 권고문에 대한 이행을 위해 민간, 행정, 의회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논의의 장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복지권고문의 주요내용인 △복지정책 혁신 △복지행정 혁신 △복지시설 혁신 △복지종사자 혁신 등 4대 분야, 25개 혁신과제 이행을 위해 민간·행정·의회는 순차적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복지재단은 광주복지협치 기본조례 제3조에 의해 광주복지협치 분과위원회 전담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은홍 기자

장애인·유공자 등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기간 '10일' 연장

'주택공급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0월부터 분양 일정이 촉박해 견본주택조차 보지 못하고 청약을 넣는 '깜깜이 분양'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3일까지 신규 분양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2배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규칙은 입주자모집기간을 '5일이상' 두게 돼 있으나 사업주체 대부분이 최소 기준인 '5일'만 입주자모집기간에 쓰고 있다. 대개 견본주택을 열고 불과 며칠만에 청약에 돌입하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촉박한 일정 탓에 상당수 청약 대상자들은 견본주택조차 보지 못한 채 청약을 접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일반분양에 앞서 진행되는 장애인, 유공자 등 특별공급의 경우 사회적 배려 대상이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일반분양에 앞서 분양된다는 이유로 '깜깜이 분양'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각 추천기관이 특별공급 명단을 제출한데만 최소 2~3일이 소요되는데도 비용이나 시간 등 사업주체들의 편의를 이유로 이 같은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짧은 공고기간으로 인해 특별공급 신청자가 분양가를 알지 못하고 견본주택도 보지 못한채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했던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며 "공공기간이 연장되면 특별공급 대상자뿐 아니라 일반분양 대상자의 경우도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파악한 후 청약여부를 결정하게 될 수 있게 돼 '깜깜이 분양'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시·도 등 승인권자가 특별공급 물량 및 청약열기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공고기간을 종전(5일)과 같이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와함께 지하에 도로, 철도가 통과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됐더라도 국가나 지자체 등이 주택건설에 동의할 경우 입주자모집이 가능해진다.

또 오는 10월24일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공인중개법인 등 새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업종과 분양대행자의 업무범위, 교육방법 등 세부사항도 제시됐다.

이밖에 일간신문에 공고되는 모집공고문 제도개선, 해외거주(90일 이상 국외 체류하거나 연간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판단기준 명확화, 공공주택 사업자 청약접수 절차를 완화했다. 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계약취소된 주택 재공급시, 당첨자 관리 및 특별공급 1회 제한 규정 등을 적용받도록 조문 정비을 정비했다. 특별공급 신청자도 거주지·거주기간을 확인토록 명시했다.